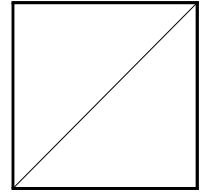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49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7. 21. (제 14 차)

의
결
사
항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1. 7. 21.

1. 의결주문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및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김종현 前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을 통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제5조(이자율의 제한)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1.1.14.) 심의필

<별지>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대표이사 김중현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

2. 조치사유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8.2.8. 이후 연 24.0%(2016.3.3.~2018.2.7. 기간 중 연 27.9%)

-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는 2018. 1. 20. ~ 2019. 6.24. 기간 중 P2P연계 대출방식으로 (주)■■■■■■■■ 등 38개 차주에게 552건의 대출(총 426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주)블루문펀드(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826,916,450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 기재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보증인이 대부 약정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및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 범위, 연체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취급한 30건의 대부 계약서류(대부 약정금액 총 150억 20백만원)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다.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채상황 및 담보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기간 중 2,075건(대부금액 총 1,606억원)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라.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2020.3.24.) 현재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10건의 대부계약(대부 약정금액 총 10억원)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 계 법 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② (생략)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 ⑥ (생략)

⑦ 시·도지사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요구

⑦ ~ ⑧ (생략)

<별표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7.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생략)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舊 제4조의3(과잉대부의 금지) (2018.11.13. 시행되기 이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舊 제5조(이자율의 제한) (2018.2.8. 대통령령 제28420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① (생략)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한다.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라. (생략)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라. (생략)

3. ~ 6. (생략)

7. 기관경고

가. (생략)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생략)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 (6) (생략)

8. 삭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5.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

2. 제재조치일 : 2021. 7.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8.2.8. 이후 연 24.0%(2016.3.3.~2018.2.7. 기간 중 연 27.9%)

-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20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는 2018. 1. 20. ~ 2019. 6.24. 기간 중 P2P연계 대출방식으로 (주)■■■■■■■■ 등 38개 차주에게 552건의 대출(총 426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주)블루문펀드(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826,916,450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보증인이 대부 약정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및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 범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는 2018.1.20.~2020.3.24. 취급한 30건의 대부 계약서류(대부 약정금액 총 150억 20백만원)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다.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채상황 및 담보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 (주)블루문캐피탈쇼설대부는 2018.1.20.~2020.3.24. 기간 중 2,075건(대부금액 총 1,606억원)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라.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2020.3.24.) 현재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10건의 대부계약(대부 약정금액 총 10억원)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3	02-3145-7407